

독립운동 기념관, 기억과 기념의 로컬리티 확산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s, Expanding the Locality of Memory and Commemoration

박 경 목*

Kyung Mok Park

국문요약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책무를 전달하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념관이 독립운동의 기억과 기념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로컬리티의 거점으로 역할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운영 형태를 행정기관형, 공공기관형, 민간위탁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각 모델은 설립 목적과 규모에 따라 정책 안정성이나 전문성 등에서 상이한 효율성을 보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기념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로컬리티의 거점을 지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로컬리티로서 정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민의 일상과 결합하는 현장성 강화이다. 둘째, 독립운동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OSMU 전략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확장하는 것이다. 셋째, 기념관의 장소성을 지역 브랜드와 결합하는 도시마케팅

<http://doi.org/10.56475/ygsr.2026.31.1.69>

논문투고일 : 2026.05.09. 논문심사일 : 2026.05.19. 게재확정일 : 2026.06.05.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E-mail: jobada@cn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전략의 도입이다.

이상 기념관은 지역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역동적 거점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기념관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시민의 삶 속에 안착시키는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고 로컬리티의 거점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독립운동 기념관, 기억과 기념, 로컬리티, 역사문화콘텐츠, OSMU, 도시마케팅

목 차

I. 머리말

III. 기억과 기념의 로컬리티

II. 기념관 운영 주제

IV. 맺음말

I. 머리말

일제의 침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안위와 가족의 평온을 뒤로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자신을 투신한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근간이 되었다.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의 결실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들 독립운동가들이 치른 대가 위에 서 있다. 따라서 이들의 헌신을 망각하지 않고 후대에 전승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부여된 책무이자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다.

이들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방식은 기념비, 동상, 조형물, 공원, 생가 보존,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재구성 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념관’은 기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의 기제로 평가받는다.

기념관은 외형상 박물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듯 보이나, 박물관이 유물의 보존과 학술 가치에 방점을 둔다면, 기념관은 특정 대상을 향한 ‘상징상’과 ‘기념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차별화된다.

이러한 기념관의 상징적 기억은 기념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원천 소재인 ‘문화원형(文化原形)’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기념관은 일정한 역사적 산물을 매개로 지역 구성원에게 기억을 확산하여 개인화 혹은 파편화된 기억을 사회적·전체적 기억으로 승화시키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 동시에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공동체를 통합하는 로컬리티(locality)의 사회적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로컬리티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단순한 물리적 위치의 맥락을 넘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합되어 형성된 ‘고유한 장소성과 정체성’을 의미한다. 즉, 삶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이며, 고정불변이 아닌 사회와 제도, 주체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이다.¹⁾ 본고에서 사용하는 ‘로컬리티’는 위와 같은 의미와 더불어, 특정 지역에 내재된 역사적 가치가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결합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적·사회적 의미로 확산되며 ‘그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고유한 본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념관은 지역의 로컬리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1) 문재원(2016),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15, 308쪽.

기념관은 설립 단계부터 목표가 뚜렷하며, 선별된 형태의 기억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공간이다. 1980년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여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건립된 독립기념관(1987)이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과 추모를 담은 베를린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2005)의 사례는 기념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도덕적 교훈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기념관은 설립 주체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기억의 저장소인 동시에, 그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시민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성시키는 유기적인 교육 시설인 것이다. 즉, 설립 주체와 운영 형태에 따라 기념관의 지향점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기념관의 운영 형태와 기억과 기념의 로컬리티 확산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다. 특히 기념관의 설립 주체와 운영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장단점은 기념관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기념관이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대중의 일상과 연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고찰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²⁾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우선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조직적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념관이 지향하는 기억과 기념의 가치가 지역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역사문화콘텐츠의 활용과 도시마케팅 전략을 연계한 로컬리티 확산 방법론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전국 각지의 기념관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운동을 공유하는 로컬리티의 중추

2) 이하 ‘기념관’으로 약칭.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론적 ·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기념관 운영 주체

1. 운영 형태

기념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입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전자는 ‘국립’, 후자는 ‘공립’이라 칭한다. 한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한 예도 있다. 이를 ‘사립’이라 칭한다. 국 ·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기념관은 설치된 그 장소가 함유한 시 · 공간의 역사적 특수성을 함유한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기념관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하나’라는 정서적 동질감을 얻는다.

그 기능을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념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행정기관형(직영), 공공기관형(특수법인 운영), 민간위탁형(법인, 단체, 개인 운영) 등 여러 형태를 두고 있다. 우선 국가가 설립한 경우 그 운영 형태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가 설립 기념관의 운영 형태

구분	운영 형태	기념관 예시	운영주체
행정기관형	국가(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직접 관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국가보훈부
공공기관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특수법인이 운영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법) 전쟁기념관 (전쟁기념사업회법)	(재)독립기념관 (재)전쟁기념사업회
민간위탁형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사)백범김구기념사업회 (사)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위 표에 의하면 국고나 지방비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기념관의 초기 설립 과정이나 이후 기념관의 성격, 운영의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등장한다.

행정기관형은 소관 정부 부처가 건립하고 운영을 직영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예시로 2022년 설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경우 국가보훈부의 소관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 조직 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조직이 별도로 신설되어 소속 공무원들이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³⁾

공공기관형은 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기념관이 건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특별법’에 의거하여 별도의 특수법인을 조직하고 그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예시로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의 경우 1986년 5월 9일 제정된 법률 제3820호 「독립기념관법」(2026년 1월 2일 최종 개정, 법률 제21065호)에 따라 건립, 운영된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독립기념관의 운영 주체를 명시했는데,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여 특수법인을 통한 운영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소관부서인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아닌 ‘재단법인 독립기념관’의 직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민간위탁형은 일정한 계기나 특수 목적에 의해 국가가 건립을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예시로 1970년 건립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당시 안중근 순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박정희 정부에서 강력하게 건립을 주도하였고, 국민 성금을 유도하여 범국가적인

3) 국가보훈부>조직도(<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48>).

4) 법제처 국가법령센터>법령(<https://law.go.kr/LSW/main.html>).

차원에서 건립을 진행하였다. 이때 건립의 제안과 주도적인 역할을 1963년 설립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 추진하여 운영 주체가 이 기념사업회에 위탁하였다. 역시 소관부서인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아닌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의 직원들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국가보훈부의 주도로 재건축 하였다.

한편, 매현윤봉길의사기념관의 경우 1988년 ‘사단법인 매현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가 주도하여 국민의 성금을 모아 건립하였으나, 2016년 국가보훈부로 이관되어 2017~2018년 대대적인 시설과 전시 개편을 통해 2018년 재개관하였다. 이렇게 초기 민간의 주도로 건립되어 민간 직영의 형태에서, 일정 기간 이후 중앙부처 소관으로 변경되어 민간 위탁으로 운영 형태가 변경된 사례가 있다.

국가 주도로 설립한 기념관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지향하므로, 자칫 지역사회와의 밀착도가 떨어지거나 운영 과정에서 로컬리티와 괴리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기념관 운영은 국립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는 기념관이 설치된 공간적 기반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경우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의 영역 내 위치함으로써, ‘서대문’이라는 구체적 지역성이 반영되었다. 독립기념관 역시 이동녕 생가, 유관순 생가, 아우내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천안 병천에 입지하면서 ‘천안’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념관이 특정 장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점유를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억의 타로서 기념관이 로컬리티의 중추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지역 시민들과의 능동적 공유와 소통이 기념관의 기억과 기념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기념관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관건인 이유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기념관도 위 국가 설립 주도의 기념관 운영 형태와 유사하다. 그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념관의 운영 형태

구분	운영 형태	기념관 예시	운영주체
행정 기관형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	유관순열사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안성3.1운동기념관 심훈기념관	천안시 예산군 안성시 당진시
공공 기관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특수법인이 운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호국보훈재단
민간 위탁형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근현대사기념관 (서울 강북구) 우당이회영기념관(서울시)	(사)민족문제연구소 (사)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행정기관형은 건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운영을 담당한다. 예시로 천안시에서 1986년 설립한 ‘유관순열사기념관’은 경내 사당과 동상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시 조직 내 사적관리소에서 운영을 담당한다.⁵⁾ 한편 ‘윤봉길’을 기념하는 기념관의 경우 서울의 ‘매한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예산의 ‘윤봉길의사기념관’ 두 군데가 있다. 전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후자는 2001년 예산군의 주도로

5) 천안시>조직도(http://27.101.50.108/yugwansun/sub01_03_03.do).

건립되었다. 따라서 예산의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예산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소속 충의사탑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⁶⁾

공공기관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는 형태이다. 예시로 1998년 개관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구의 주도로 설립하였고, 운영의 주체를 서대문구에서 설립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 이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구청장은 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⁷⁾라는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의 법률적 근거로 마련하였다. 이 경우는 초기 개관시에는 서대문구 공무원이 직영하였으나, 2004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특수법인 위탁으로 운영 형태가 변경된 사례이다.

민간위탁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또는 건립을 지원하고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예시로 서울시 강북구에서 2016년 건립한 근현대사기념관은 운영 주체를 ‘민족문제 연구소’에 위탁하였다. 이 경우 위 공공기관형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전략)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⁸⁾

6) 예산군>조직도(https://www.yesan.go.kr/ybgm/sub01_02_03.do).

7)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8) 위와 동일.

2. 운영 형태별 장단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념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을 주도하고 각각 세 가지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념하는 대상과 인물에 따라 각 기념관이 필요한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행정기관형, 공공기관형, 민간위탁형 세 운영 형태별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념관 운영 시 특성에 따른 적절한 운영 형태 선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운영 형태별 장단점 비교 분석

구분	장점	단점
행정기관형 (직영)	- 정책 추진의 일관성 - 조직, 인력, 재정 안정성 -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 전문성, 자율성 저하 - 조직 방대화 우려 - 조직의 수직 계열화 우려
공공기관형 (특수법인)	-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 조직유연성, 경영효율화 - 재정 안정성 - 일부 수익 창출	- 소관 부처의 개입시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저하 우려 - 경영평가로 인한 기념관 본연의 업무 수행 저하 - 수익성 치중시 공공성 약화
민간위탁형 (법인, 단체)	- 전문성 - 비용절감	- 인력, 재정 안정성 저하 - 투명성, 책임성 저하 우려

행정기관형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함으로써 조직과 인력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공무원 인원을 편성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에 운영비, 시설비 등이

편성되기 때문에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운영 형태의 기념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영된다. 공조직이므로 기념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업무에 대한 책임 강도가 높다.

반면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전문가가 기념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기념관 자체의 의지보다는 소속 부처의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상하관계의 수직 계열화로 자율성과 창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념관 운영에 저해될 수 있다.

공공기관형은 행정기관형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념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을 선별하여 전문성을 고도화할 수 있다.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 비해 소규모의 인력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직 운영을 ‘경영’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효율을 증대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행정기관형과 동일하게 소관부서의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므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이 운영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여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기념관을 소관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조직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독자적인 운영권이 저당 잡혀 기념관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무원 조직에는 없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는다. 이는 정부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체들의 1년간 성과를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수감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여 기념관 본연의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평가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경영평가’에 적시되어 있는 ‘수지타산’ 항목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이 자칫 수익성 위주로 치중될 수 있다.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고 수익을 최대한 증대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성에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물론 운영을 위임하였으므로 소관 부처의 적절한 견제와 지도·감독이 필요하겠으나, ‘경영평가’라는 일반 공사·공단의 평가 방식을 기념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념관 모델에 적합한 평가 방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위탁형은 기념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기념사업회 등의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민간조직이 운영하므로 세 가지 운영 형태 중 가장 유연한 조직과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더불어 운영 주체 자신이 기념관에서 기념하는 대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므로 충성도가 가장 높다. 공조직에 비해 소규모의 인력으로 운영하므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사 교체가 없어 전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장점은 단점이기도 하다. 공조직에 비해 인력과 재정 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 원인은 위탁 기간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념관은 계속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운영 주체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기념관도 일부 있다. 한편, 소관 부처의 지도·감독이 소홀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적절한 견제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영 형태별 특성은 기념관의 규모나 지향하는 목적, 기념관의 역할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기관형은 중앙부처의 특수한

목표 수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념관에 적합한 운영 형태이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국가보훈부에서 직영함으로써, 국가보훈이 지향하는 바를 기념관 운영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독립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천안시에서 운영함으로써 천안시 정체성의 기반이 ‘독립정산’에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한다. 이를 통해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천안시의 전략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형은 주로 전문성에 주안점을 둘 때 필요한 운영 형태이다.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해당 기념관의 지향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인력을 구성하여 기념관 건립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운영 형태이다. 중앙정부가 건립한 대표적 사례로 독립기념관이 있다. 건립 계획 당시부터 직영이 아닌 별도 특수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초기 인력은 대부분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자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공공기관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대표적 사례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개관 초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서대문구에서 직영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체제로 활성화되지 않자, 2004년 특수법인에 위탁하여 전문가로 인력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운영 형태의 변화는 주효하여 이후 대규모 시설 보수와 전시 개편, 원형 복원, 학술 연구 등이 수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다.

민간위탁형은 개인기념관 운영에 최적화된 운영 형태이다. 기념관에서 기념의 대상으로 삼는 인물을 이미 ‘기념사업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념사업회에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한다. 기념의 대상인 ‘인물’을 가장 충성도 높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단체가 기념관을 운영함으로써 건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안중근, 안창호, 김구, 윤봉길(서울) 등 전국 대부분의 개인기념관에서 이러한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기념관의 특성에 따라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형태는 고정불변은 아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또는 운영의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형(직영)에서 공공기관형(특수법인)으로 바뀌기도 하며, 민간위탁형(사단법인)에서 행정기관형(직영)으로 바뀌기도 한다. 전자는 앞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후자는 1984년 인천시에서 건립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사례이다. 개관 시 ‘자유총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인천광역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바뀌어 인천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⁹⁾

위와 같이 기념관은 건립 목적과 규모, 운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형, 공공기관형, 민간위탁형 등 각 조직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채택된 운영 체제는 고착된 구조에 머물지 않고, 시대적 요구와 지역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유기적으로 변모한다.

결국 기념관의 운영 체제는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기념관의 본질적 지향점인 ‘기억과 기념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책무를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로컬리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하겠다. 즉, 기념관이 채택한 운영 모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역사적 서사를 해당 지역

9) 인천시>조직도(<https://www.incheon.go.kr/IC040202?srchStrus=6286808>).

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사회적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Ⅲ. 기억과 기념의 로컬리티

1. 기억과 기념의 책무

기념관은 사회의 공공재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 기억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역사를 재생산하고, 그 역사를 기념해야 하는 책무이다. 이 기억과 기념의 책무를 위해 기념관은 시민들과 역사를 마주하며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를 위한 공공재로 역할 한다.

이를 위한 기념관의 설립은 정치적 의도·정체성 확립, 공동체 통합 등·와 결단에 따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기념관은 지역사회에 문화적 · 교육적 책임을 지며, 그 역할을 통해 기억과 기념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로컬리티 거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 기념관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선 상징하고자 하는 ‘기억’을 주민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지역의 정체성과도 연계된다. 전시, 프로그램, 행사, 축제 등 기념관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통합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념관의 ‘상장’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재한 기억의 공간과 장소,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념관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문화적·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 책임을 다할 때 기념관 설립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념관만의 독자적인 존립이 아니라 기념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징이 집중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기억을 발굴, 수집, 연구하고 역사적 기념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설립 타당성 조사 단계 시부터 장기 운영에 관한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념관의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립’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설립 이후의 무관심으로 개관 이후 기념관의 역할과 이를 위한 사업,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 곳도 있다.

전국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84개소¹⁰⁾ 가운데 초기 건립 취지대로 지역의 상징적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심지어 전담하는 직원도 없고, 시설 유지비용조차 편성되지 못한 곳도 다수인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면교사 삼아 기념관이 목적인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립 계획의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직원 배치, 연구계획, 사업계획, 중장기 예산 투입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관련 법률-조례 등-로 명시하고 개관 후 법률적 근거에 의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념의 책무를 실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10)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통계(<https://mfis.mpva.go.kr/main/main.do>).

2. 현장 중심의 기념관

기념관은 특정한 장소에 지어진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반드시 이곳을 방문해야만 기념관에 설치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인은 바쁜 일상으로 평소 기념관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시민들 일상과 기념관이 괴리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과거 전통적인 시설에서 이제 물리적 범위를 벗어나 기념관의 영역을 지역으로, 마을로, 시민들 일상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확대하여 외연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 스스로 기억과 기념을 이어 나가는데 기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산시 운산면에서 1919년 4월 8일 용현리·태봉리 주민 50~100여 명이 횃불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¹¹⁾ 이를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례가 있다. ‘사단법인 소운 이봉하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4월 8일 시민들 200여 명이 모여 기념식과 함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것이다. 2026년 제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¹²⁾ ‘이봉하’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지휘 세력 중 한 사람이었다. 그를 기념하는 사업회가 결성되었고, 단지 개인 한 명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시민 주도로 시작된 기념사업은 서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르게 되었다. 독립운동 기념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때 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필요하다. 기념관은 시설의 테두리에

11) 김진호(2025), 「서산지역 3.1독립운동」, 서산문화원, 『서산의 독립운동사』, 168~169쪽.

12) 소운 이봉하기념사업회(2026. 4.), 「제4회 4.8만세운동 기념행사」 팸플릿.

머물지 말고 시민들의 자생적 운동에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념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시민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통해 왜곡된 기억과 기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위 기념사업에 독립기념관의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발굴팀에서 서산 시민들이 기념하는 운산면 햇불만세운동의 참여자 다수를 발굴하여 독립유공자 서훈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2025년 8월부터 서산시와 독립기념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자료 발굴에 들어가, 운산면 범죄인명부를 폐기한 「수형인명표 폐기목록」을 찾아냈다.¹³⁾ 여기에서 운산면 햇불만세운동에 참여한 40여 명의 명단을 발견하였다. 이 가운데 28명이 2026년 3월 1일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서훈을 받았다.¹⁴⁾ 이로써 서산 시민들의 자생적 기념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그 실체를 인정받으며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기념관이 로컬리티의 확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면이다.

3. 역사문화콘텐츠와 OSMU전략

독립운동사의 전달 체계는 기존의 글쓰기, 읽기 방식의 텍스트 영역에서 텍스트의 배경과 문맥 연결, 대중의 선택과 경험을 중시하는 콘텍스트(context)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받아들이면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 영역인 역사문화콘텐츠로

13) 「서산 운산면 주민들이 보현산에 오른 까닭」, 『굿모닝충청』 2025년 9월 14일 자.

14) 「서산 독립운동가 28명, 3.1절 대통령 표창」, 『오마이뉴스』 2026년 2월 27일 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¹⁵⁾

최근에는 치밀하게 구성된 원작이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되어 소비되는 경향이 빈번하다. 애니메이션 ‘데몬 헌터스’로 한국의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저승사자를 비롯해 일상에서 소비되는 김밥과 라면 등이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 관심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나아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¹⁶⁾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원형 콘텐츠는 기념품, 여행상품, 음악(OST), 숏폼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소비된다.

독립운동의 기억과 기념 역시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단계를 넘어 대중들에게 과거형의 ‘역사쓰기’가 아닌 현재형의 ‘역사하기’를 소비시키기 위해 역사문화콘텐츠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것을 수행할 역할이 바로 기념관에 부여되는 시점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활용해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한다. 하나(One)의 원천(Source)을 다중(Multi)으로 활용(Use)하는 전략이다. 원래 일본의 전자공학계에서 ‘하나의 소스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다양한 종류의 매체 및 매체에 걸맞은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결과물로 아날로그화하여 이용할 경우 보다 값싸고 간단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¹⁷⁾

이것을 문화콘텐츠에 접목하였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15) 박경목(2023), 「세종지역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독립운동사연구』81, 171쪽.

16) 「케더헌 열풍은 계속된다. 한국 전통문화 관광 수요 확대」, 『매일경제』 2025년 8월 27일 자.

17) 조성룡 외(2007), 「사례분석을 통한 방송콘텐츠 OSMU의 고찰-OSMU 이론적 정립 및 비즈니스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공학회, 『방송공학회논문집』 12권 4호, 424쪽.

‘하나의 원작이 다양한 분야나 장르에서 활용되면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비즈니스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즉 기본 소스를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매체와 비즈니스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역에서 추구하는 역사적 상징을 기반으로 한 문화원형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경향이다.

축제의 경우 홍성군에서는 지역 출신 인물인 한용운, 김좌진, 최영, 성삼문, 한성준, 이용노 등 6명의 역사 인물을 기반으로 매년 ‘홍성역사 인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과 지역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¹⁹⁾

영화의 경우 서대문형무소를 배경으로 유관순의 옥중 투쟁을 그린 ‘항거(2019)’나 의열단을 소재로 한 ‘밀정(2016)’, 박열을 소재로 한 ‘박열(2017)’, 안중근을 소재로 한 ‘영웅’(2022)과 ‘하얼빈(2024)’을 통해 해당 인물의 기억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뮤지컬의 경우는 많은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다. 파주 3.1운동의 주역인 임명애를 그린 ‘명애(2019)’,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담은 ‘만세(2021)’, 천안 유관순을 기념한 ‘내 친구 유관순(2025)’, 밀양에서 김원봉을 조명한 ‘독립군 아리랑(2019)’ 등 매우 활발히 활용되는 콘텐츠이다.

방송의 경우 서대문형무소를 소재로 한 ‘KBS역사저널 그날-서대문형무소 8번 방의 기적(2019)’, ‘MBC특별기획 모범감옥(2025)’ 등의 사례가 있다.

게임의 경우 희소하지만 ‘부루마블 대한독립(2022)’, 연해주 독립운동 이야기에 기반한 모바일 게임 ‘폐치카(2020)’ 등이 있다.

18) 조성룡 외(2007), 위의 논문, 425쪽.

19)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온라인축제의 새 지평 열다」, 『충청신문』 2021년 5월 31일 자.

음악의 경우 1920년 3월 1일 유관순을 중심으로 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감옥 8호 감방에서 펼친 만세운동을 소재로 한 '8호 감방의 노래(2019)'가 여러 가수에 의해 불리면서 유관순,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심명철, 임명애, 김향화 등의 옥중 항일투쟁이 널리 알려졌다. 나아가 이 노래를 소재로 '대한이 살았다(2019)'라는 뮤지컬이 제작되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²⁰⁾

이 외에 전시와 출판, 체험 및 공연 등의 콘텐츠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고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전국 80여 개소의 기념관들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역사문화콘텐츠는 첫째, 콘텐츠 규모가 다양하다.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시·공연·축제와 같은 대규모 오프라인 콘텐츠부터 방송·음악·영화·게임·앱(App)·캐릭터와 같은 중급 규모의 미디어 및 모바일 콘텐츠, 교육·체험·출판·굿즈(goods) 등과 같은 소규모 콘텐츠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선택과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콘텐츠가 파생되고 재생산된다.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각가지 콘텐츠들이 파생, 재생산되면서 대중들의 소비 경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셋째,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기념관 등지에서 원작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민간의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영화, 음악, 게임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 시도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²¹⁾

20)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담은 뮤지컬 대한이 살았다」, 『대한뉴스』 2019년 12월 4일자.

이러한 사례는 역사문화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기념관에서 파생시켜야 할 독립운동의 기억과 기념도 역사문화콘텐츠의 일환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OSMU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념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중에게 소비될 수 있는 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파생시켜야 할 것이다.

4. 도시마케팅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기업, 주민,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하여 도시의 상품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다.

도시마케팅은 공공 및 민간이 기업가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력 있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일체의 노력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장소성을 기확하고, ‘공간과 사람과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네트워킹하며 로컬리타를 정점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도시마케팅의 최종 목적은 지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 지역민과 관광객,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을 주는 데 있다.²²⁾ 최근에는 도시 소멸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21) 박경목(2023), 앞의 논문, 174쪽.

22) 박경목(2017), 「당진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기억과 기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독립운동사연구』59, 293쪽.

로컬리티 확산 방법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마케팅의 관점에서 기념관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핵심 요소인 장소성, 역사와 문화, 공간과 사람,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획이 기념관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 함양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념관 운영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운영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소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민들의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공유와 정서적 공감감이 담보되어야 한다. 행정관서가 주도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념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시설로 부상할 것이다. 그 결과 기념관은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에게 특별한 느낌과 체험, 감동을 주는 문화자원으로 정착될 것이다.

IV. 맺음말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을 대상으로 운영 형태와 로컬리티의 확산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행정기관형, 공공기관형, 민간 위탁형이라는 세 가지 운영 모델을 통해 각기 다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기관형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공공기관형은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념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민간위탁형은 인물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진 민간단체의 선양 의지를

투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고정된 틀에 매여 있지 않은 운영 형태는 사회적 환경과 운영 성과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하며 최적의 운영 모델을 찾아간다. 이 과정은 기념관 운영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운영체계의 정립은 ‘기억과 기념의 로컬리티 확산’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이다.

둘째, 기념관의 책무를 살펴보았다. 기념관은 공동체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지역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중추적 책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내 역사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센터로 기능하며 시민사회에 문화적·교육적 가치를 환류해야 한다. 즉 기념관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한 외형 건립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역 시민과 공유하며 그 사회적 책무를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다.

셋째, 기념관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기능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서산 운산면의 자생적 만세운동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념관이 지닌 전문적인 역량이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념사업과 결합할 때, 독립운동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서사로 소환된다. 이는 기념관이 지역사회의 역사를 지지하는 중추 기관이자, 시민사회의 기억과 기념을 뒷받침하는 ‘로컬리티의 거점 센터’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기념관의 로컬리티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과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살펴보았다. 두 전략은 독립운동사의 전달 체계를 기존의 텍스트 위주에서 대중 지향적인 콘텍스트(Context)로 확장하는 실천적 방법론이다.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변주되는 독립운동의 서사는 대중들에게

과거를 수동적으로 읽는 ‘역사 쓰기’가 아닌, 현재를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역사하기’의 경험을 제공한다.

다섯째, 기념관을 단순한 시설이 아닌 도시마케팅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살펴보았다. 도시마케팅의 관점에서 기념관이 보유한 장소성과 역사적 상징은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매력적인 문화자원이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 건립 자체에 매몰된 단기적 관심을 넘어, 개관 이후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전문 인력 배치, 그리고 중장기적인 예산 투입 계획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형 기념관에 적용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영평가 방식을 기념관의 공공성과 가치 확산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평가지표로 전환하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이상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은 과거의 기억을 시설의 테두리에 가두는 시설이 아니라, 그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동적인 기억과 기념의 소통 채널이다. 역사는 기억해야만 실존하며, 기념은 그 기억을 미래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공동체의 의지이다. 그것을 수행하는 기념관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독립운동사가 시민들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며, 기념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리티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진호(2025), 「서산지역 3.1독립운동」, 서산문화원, 『서산의 독립운동사』, 168~169쪽.
- 문재원(2016),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15, 308쪽.
- 박경목(2023), 「세종지역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사연구』 81, 171쪽, 174쪽
- _____(2017), 「당진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기억과 기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293쪽.
- 조성룡 외(2007), 「사례분석을 통한 방송콘텐츠 OSMU의 고찰」, 한국방송공학회, 『방송공학회논문집』 12권 4호, 424쪽.
- 『굿모닝충청』, 『대한뉴스』,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충청신문』.
- 소운 이봉하기념사업회, 「제4회 4.8만세운동 기념행사」 팜플릿.
-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48>).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http://mfis.mpva.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예산군(https://www.yesan.go.kr/ybgm/sub01_02_03.do).
- 인천광역시(<https://www.incheon.go.kr/IC040202?srchSttus=6286808>).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천안시(http://27.101.50.108/yugwansun/sub01_03_03.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s, Expanding the Locality of Memory and Commemoration

Kyung Mok Park*

Abstract

Memorial hall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serve as essential public goods that foster communal identity and historical continuity.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strategies to transform these institutions into pivotal hubs of locality.

By analyzing operational models—government-administered, public-managed, and privately-contracted—this research identifies how these structures organically optimize to ensure policy stability and expertise amidst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Such operational evolution represents a strategic choice to fulfill their mission of social memory dissemination.

To firmly root memorial halls within their regions, three methodologies are proposed: 1) enhancing field-based engagement within citizens' daily lives; 2) expanding historical content through OSMU strategies to modernize narratives; and 3) integrating “placeness” with urban marketing for regional branding. Ultimately, memorial halls must evolve into dynamic, content-driven hubs that embed the valu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to the everyday fabric of society.

Keyword: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s, Memory and
Commemoration, Locality, Historical–Cultural Contents,
OSMU(One Source Multi Use), Urban Marketing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jobada@cnu.ac.kr).